

## 영국의 정치교육:

### 시티즌십 교육의 국가교육과정 필수교과 제정을 중심으로

한 규 선\*

#### I. 들어가는 말

영국에서 정치교육의 제도화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그 전까지 영국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달로 특별히 정치교육을 국가적으로 시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실패의 역사의 부담도 없었다는 점도 정치교육을 제도화하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의 하나일 수 있다. 정당정치와 지방정치의 오랜 전통과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가 일찍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참여의 폭이 넓고 기회가 많아서 정치교육이 정치적 참여를 통해 저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정치교육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이처럼 잘 운영되던 영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정치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선거에서 투표율의 저조, 공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대표되는 영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국의 정당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이다. 정당들의 위기감을 심화시킨 것은 영국의 청소년들의

---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 영국의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은 15세 이상부터 중앙당의 청소년 조직인 청년당에 청소년 당원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영국의 청소년들은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보수당 클럽이나 노동당 클럽이 있어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치교육이 이루어진다. 노동당의 경우 노조에 가입된 당원들이 노조활동을 통해 권리와 책임, 공공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공동체에의 참여의 현저한 감소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다. 영국 총선투표율은 1970년대, 1980년대 90년대에는 평균 74%와 75%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현저하게 60%대로 떨어졌다.<sup>2)</sup> 2001년 총선 투표율 59.4%는 1918년 이래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sup>3)</sup> 청년층(18-24살)의 투표율은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데 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 40%이하로 하락했다. 2010년의 총선은 치열한 접전이 된 선거였지만 청년층의 투표는 44%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44%의 투표율은 1997년의 총선보다 7%나 낮은 투표율이었다. 2000년에 발간된 영국의 조셉 로운트리 재단의 보고서, 『14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정치: 정치적 관심과 참여』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지식의 수준이 우려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sup> 영국청년자치회(The British Youth Council)가 인용한 조사에 의하면 30년 만에 영국청년들의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997년의 영국총선에서 18-24세의 등록 유권자중 68%만 투표에 참가하였다. 전체 인구중 8% 만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데 반해 청년들 중 40%는 아예 유권자등록도 하지도 않았다.<sup>5)</sup>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에 대한 위기의식때문에 1989년에 '시티즌십' 교육이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은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정치참여율(총선투표율)에 위기의식을 공유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시티즌십 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시티즌십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필수교과로 선정되는 과정을 통해 영국의 정치교육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장과 2장에서는 영국의

2) Electoral Commission, 2001, 2006.

3) 존 커티스 교수는 정치참가가 감소하는 두 개의 주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국대중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면서 선거와 전통적 형태의 정치를 참여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2001년 총선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영국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정치참여의 동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 John Curtice, ed., 'Turnout: Electors Stay Home - Again' in Pippa Norris and Christopher Wlezien(Britain Votes, 2005), 120-129.

4) Chrissa White et.al., *Young People's Politics: Political Interest and Engagement Amongst 14-24 Year Olds* (Lond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2000)

5) 이러한 청년층의 투표율 하락은 시티즌십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이 된 배경이 되었다.

정치교육인 시티즌십 교육의 논의가 등장한 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시티즌십 교육이 정규교과과정으로 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크릭의 ‘적극적 시티즌십’과 ‘정치적 교양’ 개념을 검토해 본다. 4장에서는 ‘적극적 시티즌십’과 ‘정치적 교양’ 개념에 입각한 시티즌 교육이 학교 교과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5장과 6장에서는 정치적 무관심과 기존 정치제도, 특히 정당과 의회에 대한 불신이 확산·심화되어가는 위기에 대해 정당들과 의회가 시티즌십 교육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영국의 정치교육이 한국에 갖는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한다.

## II. 시티즌십 교육 논의의 배경과 발전과정<sup>6)</sup>

2002년 전까지 시티즌십 과목들은 영국학교에서 필수과목이 된 적이 없었다.<sup>7)</sup> 이른바 공민학(civics)이 2차 세계대전 전에 도입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영국헌법’과 ‘영국 정부’와 같은 과목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 과목들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영국의 불문 헌법과 법의 지배에 관한 사실들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과목들의 주안점은 청소년들에게 기존정치제도와 가치에 대한 존중(deference)과 의무와 ‘좋은’ 태도라는 가치들을 주입시키는 데 있었다. 1960년 말과 1970년대에 전문 교육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정치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데이비스는 이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sup>8)</sup> 1970년에 유권자의 연령이 18세로 낮춰졌다. 이는 정치교육을 받지 않았던 한국의 고등학

6) 본 논문에서는 ‘citizenship’을 시민으로 번역하지 않고 ‘시티즌십’으로 사용한다. 시티즌십은 다양한 의미(시민, 시민성, 시민의 자질, 능력)가 내포되어 있어 리더십의 경우처럼 시티즌십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7) “시민교육은 2002년 이전까지 역사, 지리, 종교교과 같은 필수교과나 개인·사회·보건교육(Personal·Social·Health Education: PSHE)같은 선택교과에서 산발적으로 교장이나 교사의 재량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 비체계적이고 명목상으로만 시민교육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박선영, 『영국시민단체의 시민교육연구』(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8) Ian Davies, “What Has Happened in the Teaching of Politics in Schools in England in the Last Three Decades, and Why?” *Oxford Review of Education* 25(1999), 1&2: 125-140.

교 3학년에 해당되는 학생(sixth formers)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로 어린이들이 이미 정치개념과 정치적 메시지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있었다. 셋째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지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들이 있었다. 넷째 교육구조와 교과와 내용뿐만 아니라 교습과정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조직의 민주화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치교육의 장점들을 주장하는 중요한 운동인, 한사드 협회(Hansard Society)와 영국 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정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the Politics Association’s Programme for Political Education)이 1974년에서 1978년까지 운영되었다.<sup>9)</sup> 이 프로그램에서 발간된 핵심 보고서는 정치적 교양 교육 필요성을 주장하고<sup>10)</sup> 정치적 교양 교육은 ‘제도’들보다 ‘문제’(issues)들을 통해 ‘정치’를 가르쳐야 하며 단순한 정치지식보다 정치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1979년의 총선에서 보수당의 집권은 정치교육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보수당 정부는 정치교육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보수당 정부는 반인종주의 연구들, 반성차별주의 연구들, 여성학 등 ‘정치’ 교육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언론의 보수주의 논평자들이나 보수주의 사상가들은 냉전과 ‘영국사회’의 틀에 갇혀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국제연구와 같은 과목을 비애국적이라고 빈번하게 공격했다.<sup>11)</sup> 보수당 정부는 정치교육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어서 1986년에 대처 정부는 교육법(the Education Act)을 입법했는데, 44조와 45조는 지역 교육 당국들이나 교장과 운영위원회가 교사들이 당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권고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

9) Bernard R. Crick and Alex Porter, eds., (1978) *Political Education and Political Literacy* (London: Longman, 1978).

10) ‘political literacy’에는 정치적 문해력 등 다양한 번역어가 있다. 본래 뜻을 살리려면 정치적 이해력 혹은 정치적 교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교양’이라는 번역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11) Andrew Mycock, “Restricted Access: A History of National Political Education in Britain,”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PSA Annual Conference 2004, (University of Lincoln: 2004. April. 25), 12. Roger Scruton, *World Studies: Education or Indoctrination?* (London: Institute for European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1985), 7.

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는 시티즌십 교육은 다시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the Education Reform Act)에 따라 보수당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핵심 과목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보편주의 사상이 수용되었다. 1990년에 ‘시티즌십’은 국가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된 5개의 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시티즌십과 시티즌십 교육을 정치적 의제로 만드는 데 많은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원의장인 버나드 웨더릴(Bernard Weatherill)이 1990년에 영국의회 안에 ‘하원의장의 시티즌십위원회’를 만들면서 ‘시티즌십’이 영국사회에서 정치적 의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원의장의 시티즌십 위원회’(the Speaker’s Commission on Citizenship)는 1990년 보고서 『시티즌십을 권고한다』(*Encouraging Citizenship*)에서 시티즌십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과 국가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혁을 장려하는 시민단체 차터 88(Charter 88)의 노력과 함께 많은 단체 특히 공동체 자원봉사단체(the Community Service Volunteers), 시티즌십 재단(the Citizenship Foundation), 시티즌십 연구소(the Institute for Citizenship)들이 펼친 운동들이 시티즌십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sup>12)</sup>

1997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노동당은 영국에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수준들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치인들, 학자들, 압력단체들의 시티즌십 교육에 대한 여론조성에 힘입어 주로 영국(잉글랜드)에서 시티즌십 교과들이 도입되었다.<sup>13)</sup> 버나드 클릭이 의장을 맡고 있던 ‘시티즌십, 시티즌십 교육 및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자문단’(이하 ‘시티즌십 자문단’으로 약칭)의 보고서에서 영국 학교들에서 시티즌십 교육의 틀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2002년 8월 이래로 시티즌십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개인, 사회, 건강 교육에서 선

12) Ben Kisby,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British Politics* 1(2006), 151–160.

13) 오헤어(O’Hare)는 시민교육을 법정과목으로 도입하게 된 3가지 주요 요인으로 『클릭보고서』의 권고,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 불신 해소 및 청소년의 정책입안,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권(participatory right) 보장에 대한 요구를 들고 있다. Paul O’Hare and Oonagh Gay, “The Political Process and Citizenship,” *House of Commons Report* 4-6.

택과목의 하나가 되었고 중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이 되었다.

2010년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65%로 상승하면서<sup>14)</sup> 시티즌십 교육의 초점은 정치참여로부터 다른 시급한 이슈들로 옮겨 갔다. 1999년 인종주의자의 스테판 로렌스(Stephen Lawrence) 살인사건에 대한 맥퍼슨 보고서의 여파로 공동체의 응집이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상했다. 맥퍼슨 보고서(MacPherson Report)는 다양한 사회의 필요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 인종주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1년에 브라드포드(Bradford)에서 일어난 다인종 폭동과 2005년 7월 7일의 런던 폭탄 테러(7 July 2005 London bombings)들은 다인종과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응집의 약화에 대한 두려움을 더했다. '영국의 정체성'(Britishness)에 관한 정치적 담론을 반영하여 애국주의와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표면화되면서 최근에 시티즌십 교육의 강조점이 변했다. 2008년 9월에 '정체성과 다양성: 영국에서 공존하기'(identity and diversity: living together in the UK)가 4번째 핵심요소로 시티즌십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지금 국가적, 지역적,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문화와 그 연관성들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공동체의 응집 개념을 탐구하게 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영국 시티즌십 교육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영국 정치교육의 기본 개념: 적극적 시티즌십과 정치적 교양

#### 1. 적극적 시티즌십

현재 영국에서 정치교육은 시티즌십 교육으로 환원된다. 시티즌십 교육의 핵심 개념은 적극적 시티즌십이다. 적극적 시티즌십 형성은 영국 정치교육의 근간

14) 투표율은 2001년 총선에서 59%로 극적으로 하강했고 2005년에 총선에서도 역사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2001년에 비해 2% 정도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을 이루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시티즌십 교육 내용의 사실상 설계자인 크릭은 시티즌십의 교육의 중점을 적극적 시티즌십의 교육에 두었다. 적극적 시티즌십 개념은 크릭이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를 강조하는 적극적 시티즌십의 개념은 영국에서 시티즌십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도입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시티즌십의 교육을 학교에서 법정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는 시티즌십의 내용에 관해 정당 간에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시티즌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티즌십 논의는 무엇이 '좋은' 시티즌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시티즌십의 목적을 '좋은 시티즌'의 형성에 두었을 때 무엇이 '좋은 시민'인가 정의할 내리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였다.<sup>15)</sup> 정치이념에 따라 '좋은' 시티즌의 정의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보수당의 경우 '좋은' 시티즌은 기존의 정치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이며 개인이 자신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시민이다.<sup>16)</sup> 노동당의 경우 '좋은' 시티즌은 정치질서에 순응하는 시민이 아니라 정치질서를 만드는, 정치질서에 개혁을 가져오는 변화에 참여하는 시민이다. 크릭이 이끄는 시티즌십 자문단은 '적극적 시티즌십' 개념을 도입하여 시티즌십의 중심 내용으로 삼자고 주장하여 '좋은' 시민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고 있다. 보수당은 적극적 시티즌십 개념이 지역공동체나 봉사단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sup>17)</sup> 노동당과 보수당이 시티즌십 교육과정의

15) 피켓은 '좋은' 혹은 '나쁜' 시민이 무엇이나고 규정하는 것은 흔히 주관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정의된다고 말하고 있다. Jessica Pykett, Michael Saward, Anja Schaefer, "Framing the Good Citizen,"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2(2010), 523-538,

16) 정당들이 청소년 시티즌십과 민주적 참여를 주장하면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갈등들에 관해 논쟁이 일어났다.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권장하는 것은 공동체들과 사회 안에서 참여가 결여되는 데 대한 관심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주의의 확대를 고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응집과 다양한 공적 가치와 관행들 제도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공동의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의 고취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정당들은 적절한 청소년 활동, 태도, 행태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범적 가치판단을 또한 해야 한다. Andrew Mycock and Jonathan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Parliamentary Affairs* 65(2012), 146.

17) "현재의 노동당 정부(2010년 이전의)뿐만 아니라 이전의 보수당 정부에서부터 변치 않고 강조되고 있는 교육적 철학의 하나가 교육을 통한 'active citizen'의 양성이다." Holmes K. Volunteering, "Citizenship and Social Capital: A Review of UK Government Policy,"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중점을 적극적 시민 개념에 둔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양 당의 '적극적 시티즌십'의 이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철학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넬슨(Nelson)은 보수당시기의 적극적 시티즌십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와1990년대 초반 동안에 당시 보수당 정부하의 정치이데올로기는 자유시장 경제의 극대화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와 함께 개인권리의 옹호를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 시티즌십은 개인들이 복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권장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적극적 시티즌십은 정치적 참여를 권장하는 용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가치있는 일(자선사업)에 돈을 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시티즌십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의 정식과목이 아니었지만 많은 학교들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와 정치·경제 구조와 역사의 지식 획득을 강조하는 '공민학'을 가르쳤다.<sup>18)</sup>

위의 인용문단에서 보는 것처럼 보수당의 적극적 시티즌십에는 정치적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 박선영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96년 이전의 보수당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으로서 사회참여와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sup>19)</sup> 이에 반해 노동당의 적극적 시티즌십 개념은 정치적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보수당정부와 보수당 정부의 시장주도 철학과, 경제 및 사회문제의 해결에 케인즈학과 방식을 전통적으로 채택했던 과거의 노동당 정부 사이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3의 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들 사이의 밀접한 유대의 강화와 정부와 민

---

*Tourism, Leisure and Event* 1(3), (2009) 265-269. 박선영, "한국에서의 실천적 시민교육 재구성을 위한 영국 시민교육과 자원봉사활동 고찰," 『청소년학연구』 17권 제2호(2010), 95에서 재인용.  
18) Julie Nelson and David Kerr, "Active Citizenship: Definitions, Goals and Practices," *Background paper of International Review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Frameworks* (QAC 2005) 6.  
19) 박선영, "한국에서의 실천적 시민교육 재구성을 위한 영국 시민교육과 자원봉사활동 고찰," 95.



간 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s) 사업의 증가를 모색했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에서 이해되고 도입되었던 시티즌십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티즌십 교육이 2002년 11세에서 16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과목이 된 것은 노동당 정부에서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노동당정부는 적극적 시티즌십을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를 통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국가와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협동을 통한 민주적인 참여의 확대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자컴(Jochum)에 따르면 적극적 시티즌십은 시민들이 단순히 소비자 중심적 관계(consumerist relationship)가 아니라 국가와 정치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다음에서는 크릭이 말하는 '적극적 시티즌십'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크릭은 영국에서 '적극적 시티즌십'이 출현하기까지 시티즌십 논의를 지배한 것은 보수당의 '좋은 시티즌'의 정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좋은 시티즌십' 개념을 영국사회에 심은 것은 19세기 대부분의 정부 및 고위공무원들의 가치관을 형성한 학교들인 사립학교들이었다. 이들 학교들은 군대와 식민지와 본국의 공무원, 의회,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해왔다. 그 교육의 핵심은 법의 지배에 대한 존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비판적인 사고와 민주관행과는 달리 규칙에 대해 습관적인 충성과 본능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 안에서 '좋은 시민'이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왕의 신민들이 스스로를 책임뿐만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들로 생각해야 하는 적극적인 시민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 크릭은 이러한 영국의 정치문화를 비판하면서 영국에는 '좋은 시티즌십'과 '적극적인 시티즌십'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시민교육과 민주주의교육』(QCA, 1998)보고서를 제출한 자문단은 정치교육의 목표를 "정치문화의 변화"에 두고, 정치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적극적인 시민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자문단이 말하는 적극적 시민은 "공적 생활에서 영향을 주려고 하고 줄

20) Julie Nelson, "Active Citizenship: Definitions, Goals and Practices," 7.

수 있고 줄 자격이 있는 시민이며”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가진 시민”이다.

적극적 시티즌십에 입각한 시티즌십 교육과 과거 전통적인 ‘좋은 시티즌십’에 입각한 교육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티즌십의 철학적 바탕인 시민공화주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크릭의 설명에 따르면, 정치교육에서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적극적 시티즌십의 개념은 희랍·로마의 시티즌십 전통과 근대의 시민공화주의라는 두 개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희랍과 로마에서 적극적인 시티즌십은 가장 중요한 도덕이며 어떤 인간도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바깥(도시나 시민공동체)에서 사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면 신인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시민 개념의 두 번째 핵심요소는 시민공화주의이다. ‘시민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라는 용어는 17세기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군주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관심사인 문제에 관여할 권리를 갖고 있고 이들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무를 갖는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 현대의 학자들에 의해 다시 사용되었다. 시민공화주의는 영국에서 일상어가 아니다. 영국인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있지만, 영국의 민주주의에는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영국적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은 영국의 민주주의에 시민 공화주의의 전통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크릭에 따르면 영국의 민주주의 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를 위한 시민의 사상으로서 민주주의는 미국과 프랑스혁명 뒤에 영국에 늦게 등장했다. 둘째로 영국에서 민주주의는 일련의 개혁법을 통하여,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셋째로 정부제도의 갑작스러운 단절 없이 군주의 이름으로 신민의 의식이 우리 모두가 시민이라는 극적인 주장으로 변했다.<sup>21)</sup>

크릭은 영국에서 시민 공화주의가 주는 시사점은 민주주의는 투표가 아니라 합리적인 공적 논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공화주

21) Bernard Crick, *Essays on Citizenship* (London: Continuum, 2000).

의의 관점에서 보는 시민은 집단의 이익들과 가치들을 공적 토론을 통해 타협에 이르는 시민들을 의미한다. 정보의 이용과 자유언론은 직접 참여만큼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시티즌십을 위한 교육은 토론과 논쟁의 경험에서 나오는 기술들뿐만 아니라 가치와 지식들을 모두 결합시킨 것이어야만 한다.

‘적극적 시티즌십’ 개념형성은 마셜의 『시티즌십』 연구의 도움을 받았다. 하원의장이 임명한 시티즌십 위원회의 1990년의 보고서 『시티즌십을 장려한다』(*Encouraging Citizenship*)는 마셜의 책 『시티즌십과 계급』(*Citizenship and Class*)의 시티즌십의 정의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sup>22)</sup> 마셜은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 3가지를 시티즌십의 핵심으로 보았다.

시민적 요소는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 사회요소란 경제 및 안보의 권리로부터 사회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존재의 삶을 살기위한 것이다.<sup>23)</sup>

첫 번째 요소인 정치적 요소에 대해 위원회는 마셜이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권리들과 의무들 사이의 호혜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요소인 사회적 요소에 관해서도 복지국가가 의한 보호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원단체에서 서로 함께 일하거나 지역공동체의 지방당국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두 번째 요소, 정치적 요소가 어떻게 학교 안이나 바깥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일부일 수 있는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위원회는 정치적 시티즌십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 모른다. 확실히 그 당시에는 ‘적극적 시티즌십’이 주로 시민 정신, 시민현장, 공동체에서 하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개인들이 그러한 참여의 조건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준비할 수 있게

22) T.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1950) in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T.H. Marshall and Tom Bottomore (London: Pluto Press, 1992).

23)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8.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영국의 전통에서 완전한 시티즌십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적극적 시티즌십은 3개 모두 사이의 상호작용이어야만 한다. 『수월성』(*Excellence in education*) 백서(White Paper)에<sup>24)</sup> 대한 반응으로 시티즌십 재단이 내놓은 백서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우리는 공적생활의 법적인,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장으로 젊은이들을 이끄는 데 관련된 핵심개념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회와 헌법 요소들을 소개하고 개인들처럼 사회와 헌법요소들이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해력 이외에도 시티즌십 교육은 법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을 함양하고 사상의 자유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동선을 교육해야 한다. 시티즌십 교육은 사색, 탐구와 논쟁의 기술을 개발시켜야 한다.<sup>25)</sup>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공화주의’, ‘자유정치’의 관행들은 가치와 이해의 차이가 복잡한 사회 내에서 당연하거나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지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크릭은 정치나 시민교육이 하는 일은 다 같이 공공정책의 가치들이나 목표들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합의된 행동방식과 타당한 절차 안에서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찾는 데 있다고 말하여 정치에서 타협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크릭에 따르면 정치적 능력은 타협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민주시민교육은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24) DfEE, 1997.

25) Don Rowe and Jan Newton, *Citizenship Programmes in Schools* (London: Citizenship Foundation, 1997), 2-3.

## 2. 정치적 교양

두 번째로 시티즌십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필수교과가 된 데는 ‘정치적 교양’ 개념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 교양은 중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크릭은 학교에서 시티즌십 교육과정이 정치적 교양과 적극적 시티즌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여 학교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보수당의 의심을 극복했다. 크릭은 정치교육보다 더 넓은 의미의 시티즌십 교육과정의 개발을 제시했다. 크릭에 따르면 시티즌십은 정당이나 압력단체들의 정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티즌십은 “온갖 종류의 자원봉사단체, 지역공동체와 근린집단들의 활동에서 사용되는 효과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의미한다. 크릭은 시티즌십 교육에 정치적 교양 개념의 도입을 통해 2002년에 정치적 연구를 넘어서는 시티즌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크릭에 따르면 정치적 교양 개념에는 정치의 확장이 내포되어 있다.

1970년대에 우리들 중 일부는 지식을 갖춘 (informed),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시민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과 가치들 즉 ‘정치적 교양’의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시티즌십 프로그램들을 촉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정치적 교양’에 입각한 시티즌십의 개념은 너무 협소하게 정치적이었다. 그 개념은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것의 범위를 정당, 정부 그리고 의회의 정치적 과정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조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적 교양’은 거의 모든 종류의 집단 활동에서 필요하다.<sup>26)</sup>

크릭은 정치적 교양은 토론이나 실천(지역공동체에서 자원봉사)을 통해 획득되며, 이것이 전통적인 공민(civics)교육과 구별되는 시티즌십 교육의 특징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26) Bernard Crick, "Education for Citizenship: The Citizenship Order," *Parliamentary Affairs* 55(2002), 496.

정당이나 압력단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조차 지역 자원봉사 집단들 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의제들을 자유롭게 토의하면서 진정한 책임들을 지는 훈련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자원봉사나 토론을 통해 배우는 정치적 교양은 헌법이나 정부의 구조에 관한 안전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sup>27)</sup>

#### IV. 영국의 시티즌십 교육의 실제

이장에서는 적극적 시티즌십과 정치적 교양이 어떻게 실제로 영국의 시티즌십 교육에 반영되었는지를 시티즌십 국가교육과정의 프로그램(2002년에서 2006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sup>28)</sup>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은 국가공통교과과정에서 목표와 3대요소를 지침으로 하고 있다.

##### 1. 시민교육의 목표

시티즌십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과 기술 이해를 획득하게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티즌십 교육은 학교 안과 바깥에서 교양을 갖추고 사려깊고 책임있는 시티즌이 되도록 도와준다. 시티즌십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들 안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민주주의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도록 한다. 시티즌십 교육은 학생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존경심을 갖도록 장려하며 학생들이 자신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27) Bernard Crick, "Education for Citizenship: The Citizenship Order," 496.

28) DFEE/QCA, *Citizenship in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London: DFEE/QCA, 1999)

<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eOrderingDownload/QCA-99-470.pdf>

## 2. 시티즌십교육의 3요소

크릭보고서(학교에서 시티즌십을 위한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고문단 보고서)는 모든 시민교육에 대한 기초가 되어야 할 3개의 상호관련된 요소를 지적했다.<sup>29)</sup>

### 1) 사회적 및 도덕적 책임

학생들은 수업활동과 토론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관해 배워야 한다. 학생 서로에게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 2) 공동체 참가

학생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이웃,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을 돕는 이점들에 관해 배워야 한다.

### 3) 정치적 교양

정치적 교양은 정치적 지식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학생들은 지역에서 국가, 국제차원까지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학생들은 공동체생활에서 스스로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들과 가치들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은 정치적 지식이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들이 어떻게 영국의 학교교과과정에 반영되어있는지를 중·고등학교

---

29) 시티즌십 교과가 교육과정안에서 정착하면서 2007년 이후 3대 주요 요소가 민주주의와 정의, 권리와 책임, 정체성과 다양성으로 바뀌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티즌십 교육이 법정과목이 되는데 적극적 시티즌십과 정치적 교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 양개념이 실제 교육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즉 개념들의 실제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2006년까지 사용된 1999년의 시티즌십 교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 2007년 이후에도 시티즌십(active citizenship)과 정치적 교양(political literacy)은 시티즌십 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까지 자세히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주요 과정(Key stage) 4: 10-11학년 과정(나이: 14-16세)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정치적,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이슈들과 문제들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을 배운다.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법률, 정치, 종교, 사회와 경제제도 및 체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운다. 이전 단계보다 더 자세하게 이들 제도들이 실제 운용되는 것과 영향에 대해 배운다. 학생들은 학교와 이웃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계속 하여 이전 단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배운다. 학생들은 비판적 의식과 평가를 점점 강조하면서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범위의 기술들을 개발한다. 학생들은 공정함,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과 학교, 지역, 국가, 지구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배우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 지역, 국가, 지구에 대한 지식, 기술과 이해력을 발전시킨다.<sup>30)</sup>

#### 1) 교양있는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력<sup>31)</sup>

- \* 학생들은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인권들과 책임감 그리고 형사재판제도와 민사재판제도와와의 역할과 운용을 포함하여 이들 권리와 제도가 어떻게 시민들과 관련을 갖는가를 배운다.
- \* 영국 안에 있는 국가적, 지역적, 종교적, 인종적 집단들의 기원과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상호존경과 이해의 필요성을 배운다.
- \* 법을 만들고 형성하는 데에 대한 의회, 정부, 재판소의 기능을 배운다.
- \* 민주적 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다.
- \* 비즈니스와 금융서비스의 역할을 포함한 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운다.
- \* 개인이나 자원단체가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럽 안에서, 국제적으로 사

30) <https://www.education.gov.uk/publications/eOrderingDownload/QCA-99-470.pdf>

31)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becoming informed citizens



회변화를 일으키는 기회들에 관해 배운다.

- \* 정보를 공급하고 의견에 영향을 끼치는데 인터넷을 포함하여 사회에서의 자유언론과 방송의 역할의 중요성을 배운다.
- \* 소비자, 고용주, 피고용인들의 권리와 책임들에 관해 배운다.
- \*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유럽 안에서 영국과의 관계들 그리고 영연방과 유엔과 영국과의 관계들에 대해 배운다.
- \* 지속가능한 성장을 포함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의존과 책임감에 관한 광범위한 이슈들과 도전들에 대해 배운다.

## 2) 질문과 의사소통의 기술 개발<sup>32)</sup>

- \* 학생들은 다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과 문제와 사건들을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통계의 사용과 남용에 대해 의식할 수 있도록 배운다.
- \* 앞서 말한 이슈와 문제들과 사건들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것을 배운다.
- \* 그룹별 그리고 교실 토론에 기여하는 것과 보다 공식적인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운다.

## 3) 참여 및 책임있는 행동에 관한 기술 개발<sup>33)</sup>

- \* 학생들은 상상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고려하고 자신들의 견해가 아닌 다른 견해들에 관해 생각하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배운다.
- \* 학교와 공동체에 기반을 둔 활동에서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 \* 참여의 과정에 대해 사색하는 것을 배운다.

---

32) Developing skills of enquiry and communication

33) Developing skills of participation and responsible action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영국의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의 3대요소인 사회적 도덕적 책임, 공동체 참여, 정치적 교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천을 중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론과 의사소통의 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회정치의 특성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시티즌십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토론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잘 듣는 훈련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국인들은 시민교육이 정규과목이 되기 전에는 영어과목 시간에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장인 5장에서는 영국 정당의 청소년을 위한 시티즌십 교육을 미콕(Andrew Mycock)과 톤지(Jonathan Tonge)의 논문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V. 영국 정당의 청소년을 위한 시티즌십 교육

### 1. 청년당을 통한 정치교육

미콕(Andrew Mycock)과 톤지(Jonathan Tonge)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1990년대까지는 정치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1990년대까지는 정치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시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영국정당에 속하는 청년 조직인 청년당을 통해 한다는 인식이 지배했다. 청년당에 청소년들이 가입하면 당원활동을 통해 정치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영국 정당들은 청년조직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 청년조직은 정당에서 유명무실한 존재는 아니다. 청년조직은 정당 안에서 총원역할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 기금 모금, 정치 소통과 당 조직과 같은 당의 중요 기능들 안에서 청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청년조직들은 당의 간부들이 전국, 지역, 지부 차원에서 미래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정책 연구자들 혹은 정당의 조직자나 관리자들이 될 청년들을 찾아내서 키우게 한다. 영국정당에서 청년조직은 역사적으로 당원수가 큰 규모였다. ‘청년보수당’(the Young Conservatives)의

경우에는 지금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한 때 당원이 25만명에 달했었다.<sup>34)</sup> 영국정당의 청년조직들은 주류 정당의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중앙당의 로선과 다른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와 같이 비판적이거나 도전적인 태도로 인해 정당의 청년조직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정당 안에서 청년들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거나 토론을 형성하는 잠재력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정당들이 정당문제들에 대한 발언권을 너무 많이 주는데 대해 계속 소극적이었다. 정당들은 당의 청년조직의 당원들이 내놓는 급진적인 정책제안들이 나이 많은 유권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당원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제한되는 것은 운영자금을 정당에 의존하고 있는 정당내 청년조직의 순종적인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청년부가 정당 중앙당과 분리된다고 해서 청년부가 정책개발과 정치토의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당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와 정책위원회(policy forum)에 청년대표들이 있다. 모든 정당들은 당원들도 참석하는 청년부를 위한 당대회와 행사들을 따로 개최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청년대표의 영향력에는 제한이 있으며, 정당들은 일반적인 정치이슈들보다 청년관련 정책들에서만 당의 청년부(청년당)와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성인’당에 대해 당의 청년부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당의 구조안에서 차지하는 하위의 지위 때문에 약화된다. 킴벌리가 결론을 내리듯이, 오늘날 매우 적은 수의 청년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sup>35)</sup>

## 2. 정당들의 청소년 시티즌십 교육에 대한 입장과 대응

1950년대와 60년대의 평온기에 정당들은 청소년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34) A. Mycock, and J.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Parliamentary Affairs* 65(2012), 147.

35) Richard H. Kimberlee, "Why Don't Young People Vote at General Elect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5(2002), 89. Mycock and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145에서 재인용

청소년 시티즌십 혹은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었지만 정당들은 정책의 틀을 법과 질서의 문제에 국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에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1959년에 노동당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위함 시도로 청년위원회(Youth Commission)를 설치했다. 1950년대의 모델과 후기 청년위원회의 차이는 초기 청년위원회는 노동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고 후기 청년위원회는 전체적인 비정파에 입각한 대응책이었다는 점이다.<sup>36)</sup>

노동당과 자유당들은 1966년 총선 공약에서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을 이미 주장했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시티즌십의 권리라는 더 큰 맥락에서 논의되었다.<sup>37)</sup> 필딩(Fielding)이 주장하는 것처럼,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노동당이 노동당의 위원회와 청년 사회주의자(Young Socialists)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을 정치로 끌어오려고 시도했지만 그 시도는 성과가 없었다.<sup>38)</sup> 노동당은 청년들에게 “책임”을 주입시키고 싶어 했다. 이를 통해 노동당은 청년들이 노동당의 정치주장들을 받아들일기를 원했다. 민주주의의 규범들과 정당 정치는 위로부터 청년들에게 주입되었다.

노동당은 소비주의의 확산 속에 개인주의적 소비 양식이 집단적인 정치 조직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당이 정치적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 보수당은 청년들의 정치활동과 사회활동들을 중시했다. 그 결과 보수당의 청년조직인 청년 보수당은 회원수가 노동당의 청년조직인 청년 노동당의 10배에 달했다.

36) Mycock and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146.

37) 영국은 1969년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세계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상당히 보수적 영향을 받았던 정당인 노동당에게는 대담한 조치였다. 이전에 노동당의원들의 1/3은 선거연령의 변화를 지지하지 않았었다. Mycock and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147.

38) Steven Fielding, *The Labour Governments 1964-1970*. Vol. 1.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166. Mycock and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147에서 재인용

1970년대 동안에, 정당들은 청년의 교육, 훈련, 고용 문제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청소년 시티즌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 개혁들을 할 때도 청년들과 거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 노동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도입하는 캠페인들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청소년 시티즌십과 정치참여의 의제들은 거의 무시되었다. 권리에 입각한 시티즌십 교육들은 청년들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았다. 청년들의 이해(利害)관계는 정당의 정치 토론이나 정부정책에서 여전히 지엽적인 문제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특히 고교졸업생들이, 성인들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1980년대에는 청년들의 탈정치화(脫政治化: civic disengagement)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문제의 대응책으로 정당들은 시티즌십이나 시민참여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보지 않고 청소년들의 실업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경제조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청년 실업자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인식에서 정치참여를 실업문제와 결부시켰다. 정당안에서 청년부(청년당 youth wings)의 당원수는 1980년대에 현저하게 감소했다.

1980년대에 정당들은 청소년 시티즌십을 지엽적인 관심사로 간주했다. ‘시티즌십 교육’(education for citizenship)은 1990년에 국가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된 5개의 선택 과목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시티즌십 교육은 정치참여나 정치적 지식에 대한 관여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한 대처주의의 견해를 뚜렷하게 장려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당들은 영국사회에서 공적 삶과 민주 정치를 약화시키는 불신, 불만, 무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sup>39)</sup> 지난 30여년 동안에 정당들은 시티즌십을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했다. 세계화, 산업공동화, 이민 그리고 전후 경제·사회 합의의 쇠퇴와 같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영국의 주요정당들은 권리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시티즌십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자유주의의 시티즌십 개념

39) Mycock and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149.

대신에 공동체주의적 시티즌십 개념들이 시간이 갈수록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고용과 조건부인 공적 복지와 공동체의 사회적 자산 축적을 통해 시티즌십의 책임들을 실현하는데 시민들의 책임과 의무들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정치자본과 국가와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의 균열 때문에 시티즌십을 재구성하는데 시민적 공화주의 사상(civic republican thinking)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했다.

청년 시티즌십과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들은 시민과 공적 변화에 집중했다. 1997년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권리에 기반을 둔 시티즌십은 점차로 영향력을 상실했다. 권리에 기반을 둔 시티즌십은 분열적이고 고립적이며 이기적 가능성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공동체의 참여와 응집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와 호혜성의 가치가 점점 더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공동체 안에서 참여와 자원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적극적 시민이 되도록 장려하는 공동체주의적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시민참여의 위기에 대한 노동당의 반응은 2002년부터 시티즌십 교육을 필수 교과로 채택하는 것이었다. 1997년 당의 총선 공약에는 시티즌십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당이 청소년의 시티즌십 교육을 중요시하게 된 것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려는 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블링켓(David Blunkett)의 결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노동당이 집권하는 동안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정치적 지식의 확대를 촉진하려는 생각은 약화되지 않았다. 노동당 정부는 정부의 정책결정 구조를 모방하여 설립된 청년과 학교의 자치회(council)를 적극 장려했다. 청년들의 정치 비참여(youth political disengagement)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든 브라운의 노동당정부는 2007년의 녹색(Britain Green Paper 영국 정부의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에서 약속한 청년 시티즌십 위원회(Youth Citizenship Commission)를 2008년 설립했다. 청년 시티즌십 위원회의 소관은 청소년들이 시티즌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검토하고 정치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가하는 방법들에 대해 고려하고 선거연령이 16세까지 낮추어야 되는지에 관해 자문하는 것이다. '적극적 시티즌십'의 맥락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노동당의 사상과 정책 의제들은 공동체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의 시티즌십 개념으로 합쳐졌

다. 할(Hall)이 주목한 것처럼 이것은 다른 권리들에 기반을 둔 시티즌십 개념들이 ‘수동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sup>40)</sup>

1997년에서 2010년까지 야당으로 있으면서 보수당은 청년들의 정치 비관여나 청년 시티즌십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당은 민주주의 위원회(the Democracy Commission)를 설립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치와 보수당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자유민주당(2010)은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주창했고 비례대표제의 확대 쪽으로 선거개혁이 된다면 청년 유권자들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에 연정을 형성한 이래로 청년 시티즌십에 관련된 정책은 시민(정치) 참여(civic participation)보다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참여(civil engage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41)</sup> 이 시티즌십 개념의 핵심은 책임의 공유를 장려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를 신뢰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국가의 관계의 재균형을 모색하는 ‘큰 사회’(Big Society)의 담론 정책 의제들이다. 전국시민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는 청년들 사이에 정부의 ‘큰 사회’ 주창의 강령으로 등장했다.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청소년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게”<sup>42)</sup> 하기위해서 「16살을 위한 전국시민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국가시민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는 정치참여를 직접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다. 전국시민서비스의 시험계획들은 정치적 운동보다 공동체에 집중하고 있다.<sup>43)</sup> 시티즌십 교육과 관련된 노동당정부시기에 설립된 많은 청소년 관여 프로그램들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기되었다. 정치제도와 정당들의 개혁이나 선거연령 인하와 같은 의제들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고용, 교육, 자원봉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

40) Tom Hall, Howard Williamson and Amanda Coffey, “Conceptualizing Citizenship: Young People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3(1998), 301-315. Mycock and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149에서 재인용

41) Mycock and Tonge,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153.

42) Cabinet Office, 2010년 2월.

43) 이는 과거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이끌던 보수당 정부에서 강조하는 “정부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한,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적극적 시티즌십을 상기시킨다.

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영국의회의 청소년 시티즌십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VI 영국의회의 청소년을 위한 시티즌십 교육

영국의회의 정치교육은 학교의 정치교육과 궤를 같이한다. 비정파적 정치교육을 위해서 영국의회는 학교의 정치교육과 연계해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시민교육에서 강조되는 ‘경험적인 시민교육’은 영국의회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을 이루고 있다. 크릭 보고서 (Crick-Report)에서 제시한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3가지 영역인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감 ‘지역사회 참여’ 정치적인 지식 (Crick 1998,S.13)은 영국의회가 일반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반영되어 있다.

영국의회는 영국국민들이 영국의회의 이미지가 추상적이며, 일반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국민의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게 일반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국민과의 연결’(out reach)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 1. 국민과의 연계 프로그램

우리나라 국회의 ‘국회 민원, 국회관람, 의정연수, 정보공개, 국민여론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민과의 소통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국민과의 연계프로그램은 의회 개원 후 2011년 10월 31일과 11월 6일에 열리는 ‘의회주간 행사를 갖는다. 이 ‘의회주간’ 동안 영국 전국에서 영국 하원과 상원의 운영의 이해를 돕는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를 통하여 영국국민은 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주목할 기회를 갖는다. ‘국민여론 프로그램’(Have your say), ‘하원의원방문 프로그램’(Contact your MP), ‘상원위원방문 프로그램’(Contact a Lord), ‘선거와 국민투표 소개 프로그램’(Elections and referendums)과 ‘영국의회의 국민과



의 연결(Parliamentary Outreach)가 있다.

한국국회와 비교했을 때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계(Get involved) 프로그램 중 국민소통의 취지를 가장 살리는 프로그램은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이다.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은 영국의회가 국민과 동떨어지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의제로서 영국의회가 국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대의제의 문제점인 간접적 접촉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은 의회가 하는 업무 및 과정, 의회의 국민과의 연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상·하원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유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회는 의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있다.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들:

- \* 의회의 운영에 대한 무료 연수 (Delivering free training explaining the work of Parliament)
- \*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 대한 참여 증진 (Promoting engagement with Select Committee inquiries)
- \* 대중들이 입법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Showing how the public can get involved with legislative scrutiny)
- \* 영국 각 지역과 의회의 연관성을 보여주기(Demonstrating Parliament’s relevance to each part of the UK)

우리 한국의회도 ‘소통광장’의 범주 안에 국회 민원, 국회관람, 의정연수, 정보공개, 국민여론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국민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에는 한국국회에는 ‘영국 각 지역과 의회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없다.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 중 우리국회가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실행프로그램이 영국 각 지역과 의회의 연관성을 보여주기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들은 수도에 위치한 의회에

대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앙과의 거리가 멀수록 의회에 대한 관심이 비례해서 적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정연수 프로그램도 수도권 런던에서 하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열린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 북서부에서 국민과의 만남 (Reaching out in the North West) 프로그램
- \* 뉴카슬에서 제출법안에 대해 관여하는 의회 워크숍 개최 (Newcastle to host Parliament workshop on engaging with proposed laws)
- \* 국회의장이 의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설 예정 (Speaker to give speech on improving public perception of Parliament)

영국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영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부 미들랜드 지역, 영국 동부지역, 런던 지역, 북동부 지역, 북서부 지역, 북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남동부 지역, 남서부 지역, 웨일즈 지역, 서부 미들랜드 지역, 요크셔·험버 지역 등의 12개 지부가 있다. 영국의 지역별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 지부들은 영국의회의 활동들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며 상·하원의 토론과 결정들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역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의 담당자들은 해당지역에 있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영국의회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영국의회의는 의정연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가장 편한 장소에서 의정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국회도 영국의 사례를 따라 의정연수 프로그램의 지역별 지부를 두거나 국회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국의회의의 ‘국민과의 연결’ 프로그램의 성공은 다양한 집단의 단체들, 즉 지역단체나 사업체들에서 전국적인 운동 네트워크나 NGO들과의 파트너십을 잘 운영하는 데 있다. 이는 우리국회의의 ‘국민소통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데 고려해야 될 점이다.

## 2. 영국의회의 학교 연계 교육 서비스

‘영국의회의 학교 연계 교육 서비스’(Parliament’s Education Service)는 영국의회의 주요 정치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의회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중·고 학교들과 협력하여 정치교육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들과 영국 국회 의원들의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의회는 일반국민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따로 ‘영국의회의 학교 연계 교육 서비스’를 통한 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의정연수프로그램은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를 연결해서 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은 없다. 이는 영국의 의회 시민 교육이 우리 국회의 정치교육프로그램보다 범위의 폭이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국가가 ‘영국의회의 학교 연계 교육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과과정에 시민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정립이 선작업이며 이후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VII. 맺는 말: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 본 영국의 정치교육은 학교의 시티즌십 교육은 정당·시민단체·의회와의 협력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의회나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가교육과정에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의회·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이 도입되지 않으면 정치교육은 시민단체들과 국회·정당의 협력을 통한 효율성과 사회 전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시티즌십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도입을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절대적이다. 영국의 시티즌십 교육이 정식교과로 늦게 선정된 이유는 가르칠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시티즌십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데는 정치적인 획일성에 대한 위협과 정치적인 편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sup>44)</sup>이 점에서 영국의 시티즌십 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에서 시티즌십 교육이 정식교과로 채택되는 데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국민윤리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된 주입식(indoctrination) 교육의 폐단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근 20여년 간에 걸쳐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 시티즌십 교육을 준비해 온 영국의 신중한 접근은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정립에서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 초당적 지지를 받은 것은 정파적 이해(利害)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정치교육의 내용이 ‘정치적 교양과 ‘적극적 시민’의 개념을 양대 축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다. 영국에서 정치교육이 정식교과로 지정된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좌·우 양진영에서 ‘좋은 시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 ‘정치적 교양과 ‘적극적 시민’의 개념의 도입은 ‘좋은 시민’에 대한 영국의 좌·우진영의 논란을 극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한국의 시티즌십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교양과 ‘적극적 시민’의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논문 접수일 : 2013년 04월 08일

▶ 논문 심사일 : 2013년 04월 29일

▶ 논문 게재일 : 2013년 05월 10일

44) 1998년의 『크릭보고서』를 보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공정하게 이를 가르쳐야 하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록

## 영국의 정치교육: 시티즌십 교육의 국가교육과정 필수교과 제정을 중심으로

한규선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정치교육인 ‘시티즌십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의 필수교과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영국의 정치교육의 특징들을 조명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늦게 영국에서 정치 교육이 법정 교과가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데는 좌·우 양진영에서 ‘좋은 시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 버나드 크릭의 ‘정치적 교양’과 ‘적극적 시티즌십’의 개념의 도입은 ‘좋은 시민’에 대한 영국의 좌·우진영의 논란을 극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적극적 시티즌십’은 “공적 생활에서 영향을 주려고 하고 줄 수 있고 줄 자격이 있는 시민”이며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가진 시민”이다. 정치적 교양은 지식을 갖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시민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과 가치들이다. ‘적극적 시티즌십’과 ‘정치적 교양의 개념’들은 영국 정치교육의 양대 지주를 이루며 좌·우파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시티즌십 교육이 지속성을 갖게 되고 학교·정당·의회·시민단체들이 시티즌십 교육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만든 원동력이다. 정치적 교양과 ‘적극적 시티즌십’의 개념에 입각한 크릭의 시티즌십 교육 모델은 한국의 시민교육발전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주제어 : 민주시민, 민주시민 교육, 적극적 시민, 정치적 교양, 정치참여.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Education in England: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ship a Statutory Subject  
in a National Curriculum**

Han, Kyusun

This study examin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political education in England(UK) through examination of the debates over introduction of citizenship as a statutory subject in a National Curriculum. It has taken so long for England unlike every other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world, to make citizenship a statutory subject in a National Curriculum. One of reasons is that fierce political debates to reach the definition of 'good citizenship' had obstructed the introdu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a National Curriculum. Professor Sir Bernard Crick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problem with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literacy and the active citizenship. Crick's framework of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 political literacy and the active citizenship would be instrumental in developing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by providing knowledge of and the skills to be effective in all manner of voluntary, community and neighbourhood groups.

□ Key words : Citizenship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Literacy and Active Citizenship, Community Engagement

## 참고문헌

- 박선영. 2010. “한국에서의 실천적 시민교육 재구성을 위한 영국 시민교육과 자원 봉사활동 고찰.” 『청소년학연구』 17권 제2호.
- \_\_\_\_\_. 2011.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시민교육고찰.” 『청소년문화포럼』 제26권.
-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for Democracy in Schools*. London: QCA (n.b. available at www.dfes.gov.uk/citizenship)
-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2000. *Citizenship for 16-19 Year Olds in Education and Training*. London: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www.dfes.gov.uk/citizenship)
- Crick, B. and PORTER, A. (Eds.) 1978. *Political Education and Political Literacy*. London: Longman.
- \_\_\_\_\_. 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London: QCA.
- \_\_\_\_\_. 2000. *Essays on Citizenship* (London, Continuum).
- \_\_\_\_\_. 2002. “Education for Citizenship: The Citizenship Order.” *Parliamentary Affairs* 55, 488-504.
- DFEE/QCA. 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London: DFEE/QCA.
- \_\_\_\_\_. 1999. *Citizenship in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London: DFEE/QCA.
- Fielding, S. 2003. *The Labour Governments 1964-1970. Vol 1*.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all, T., Williamson, H. and Coffey, A. 1998. “Conceptualizing Citizenship: Young People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3. 301-315.
- Kisby, B. 2006.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British Politics* 1(1): 151-60.
- Kisby, B. and Sloam J. 2009. “Revitalising Politics: The Role of Citizenship Education.” *Representation* 45(3). 313-324.

- Kimberlee, R. 2002. "Why Don't Young People Vote at General Elect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5. 85-97.
- Marshall, T.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T.H. Marshall and Tom Bottomore(1992). London: Pluto Press.
- Mycock, A. 2004. "Restricted Access: A History of National Political Education in Britain."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PSA Annual Conference, University of Lincoln, April. 25.  
<http://www.psa.ac.uk/journals/pdf/5/2004/Mycock.pdf>
- Mycock, A. and Tonge J. 2012. "The Party Politics of Youth Citizenship and Democratic Engagement." *Parliamentary Affairs* 65. 138-161.
- Pykett, J., Seward, M. and Schaefer, A. 2010. "Framing the Good Citizen."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2. 523-538.
- Scruton, R. 1985. *World Studies: Education or Indoctrination?* London: Institute for European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 Speaker' Commission on Citizenship. 1990. *Encouraging Citizenship: Report on the Commission on Citizenship* (HMSO).